

---

# 『정부3.0』 추진 기본계획

---

2013. 5. 28

관계부처 합동

### 정부3.0 관련 대통령 말씀

- “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.” (2013. 2. 25, 대통령취임사)
- “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.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” (2013. 4. 5,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서)
- “각 부처마다 어떻게,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,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.” (2013. 5. 13, 수석비서관 회의시)
- 비리나 잘못을 바로 잡는 시발점은 공개라고 생각합니다.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, 민간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됩니다. (2013. 5. 20 수석비서관 회의시)
- “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.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” (2013. 3. 16, 장차관 국정토론회시)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 배경 .....   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정부3.0의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.....      | 2  |
| III. 정부3.0 세부과제 .....             | 4  |
| 1. [전략 1]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.....       | 4  |
| 2. [전략 2]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.....      | 11 |
| 3. [전략 3]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.....     | 16 |
| IV. 정부3.0 추진체계 .....              | 19 |
| <br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〈참고자료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. 추진일정 .....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2.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 공개대상(예시) ..... | 22 |
| 3. 공공정보 개방 로드맵(예시) .....          | 23 |
| 4.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.....   | 25 |

## I 추진 배경

### □ 행정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

- 저성장 구조 속에서 경제부흥의 새로운 모멘텀 필요
  - 고용률 정체, 양극화 심화 등 위기를 타개할 신성장 동력 창출 시급
-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제의 대두
  - 기후·환경 변화, 에너지·식량 부족, 저출산·고령화 등 국가간·부처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 급증
-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-국민간 관계 변화
  -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일방향적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
  - 모바일·SNS 등 확산에 따라 정책에 대한 참여, 투명성 요구 증대
-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등장
  -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ICT 기술 활용 필요성 제기

### □ 우리 정부의 현주소와 국민의 바람

-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정책의 투명성·수용성 저하
  - \*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순위 ('08) 40위 → ('10) 39위 → ('12) 45위
- 정부 내 칸막이로 적시성 있고 효과적인 정부운영에 한계
  - \* 국제경영개발원(IMD) 발표 국가경쟁력 22위, 정부효율성 25위('12)
-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만족감 저조
  - \* OECD국가 중 자살률·이혼율 1위, 국민행복지수(GNH) 97위('12.美갤럽조사)

⇒ 「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」 구현으로 국민행복 증대

### 1. 비전과 전략



### 2. 중점 추진과제

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소통하는<br>투명한 정부   |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<br>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<br>③ 민·관 협치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 잘하는<br>유능한 정부  |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<br>⑤ 협업·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<br>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민 중심의<br>서비스 정부 |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<br>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<br>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<br>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|

## 「정부3.0」이란?

### ○ 정 의

-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·공유하고,  
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·협력함으로써
-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 
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 
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

### ○ 방 향

-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, 정부-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
- 국가보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
-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
-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
-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,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 
플랫폼 정부

<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>

| 구분     | 정부1.0      | 정부2.0     | 정부3.0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영방향   | 정부 중심      | 국민 중심     | 국민 개개인 중심                |
| 핵심가치   | 효율성        | 민주성       | 확장된 민주성                  |
| 참여     | 관 주도·동원 방식 | 제한된 공개·참여 | 능동적 공개·참여<br>개방·공유·소통·협력 |
| 행정 서비스 | 일방향 제공     | 양방향 제공    | 양방향·맞춤형 제공               |
| 수단(채널) | 직접 방문      | 인터넷       | 무선 인터넷<br>스마트 모바일        |

**전략 1**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

| 현재 (As-Is)   | 미래 (To-Be)  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▮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성 제약</li> <li>▮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미흡</li> <li>▮ 국민의 국정참여 기회 미비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▮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·신뢰성 제고</li> <li>▮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</li> <li>▮ 국민과 함께하는 민·관협치 활성화</li> </ul> |

**1**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「국민의 알권리」 충족

○ ‘공급자 위주’에서 ‘국민 중심’ 정보공개로 패러다임 전환

- (원칙) i) 사실을 있는 그대로, ii) 전과정에 대하여, iii) 국민 중심으로 공개

\*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한 정책의 결정·집행과정의 참여자 및 이력관리 강화

- (대상)

예시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

- (식품·위생) 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, 위생의무 위반업소 명단
- (치안) 학교폭력 현황, 청소년 범죄현황,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등
- (가정·복지) 유치원·어린이집·노인장애인시설 정보, 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
- (지역물가) 공공요금 원가 산정기준, 지자체별 주요 서민생활물가

예시②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
- (공공사업) 하천, 도로 등 토목공사 관련 사항, 지역축제 원가정보
- (계약정보) 공사발주 세부내용 및 계약 전 과정

예시③ 예산집행내용,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
- (지방재정)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부채 현황, 지방공기업 경영 전반
- (국정감시)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,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

- (방법) 시민단체 공개 요구사항, 국민신문고 내역 분석, 분야별 여론조사, 언론보도 분석, 전문가 간담회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공개수요가 큰 정보 파악, 선제적 공개

《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공개 대상(예시) 》

<사례 1 : 지역 축제·행사 원가정보 공개>

◆ (현행) 지역축제 관련 총예산과 집행액, 불용액에 관한 정보만 한정적으로 공개

→ (개선) 공인된 기관에서 분석한 사업원가 및 수익내역 상세 공개

<세입세출결산서>

| 구분   | 금액       |
|------|----------|
| 세입결산 | 입장료수익 5억 |
| 세출결산 | 축제비용 10억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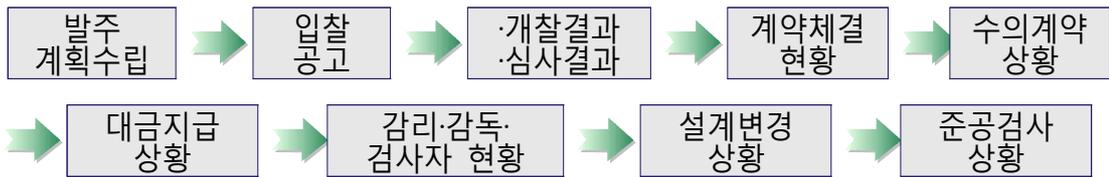
<재정운영보고서>

| 구분       | 총원가   | 사업수익 | 순원가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|
|          | 20억   | 5억   | 15억     |
| △△<br>축제 | ※원가내역 |      |         |
|          | 지출    | 10억  | 사업직접비   |
|          | 기타지출  | 1억   | 사업외편성액  |
|          | 출연금   | 7억   | 축제운영보조금 |
|          | 비현금지출 | 2억   | 자산 감가상각 |

<사례 2 : 지방계약정보 공개 >

◆ (현행) 발주계획과 수의계약 내역만 공개

→ (개선) 전 계약과정을 공개



<사례 3 :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관심항목 공개 확대 >

◆ (현행) 지방공기업 매년 44개 항목(일반현황, 부채) 공개

→ (개선) 이익배당 현황, 주요 계약사항 등 상장기업 수준으로 공개, 임원 국외출장 정보, 직급별 직원현황 등 사회적 관심항목 추가

<사례 4 : 지역단위 통합재정통계 산출·공개 >

◆ (현행) 지방일반재정, 지방교육재정, 지방공기업 통계가 분리·공개

→ (개선) 지자체별 종합적인 재정상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통계 산출



○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 대폭 확대

-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, 비공개 정보\*를 최소화

\* 비공개대상(정보공개법 제9조) : 법령상 비밀, 국가안보, 국민생명·신체보호, 사생활 보호, 공정한 의사결정, 재판, 경영·영업상 비밀, 투기우려 정보

- 공개 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 공개
- 공개 대상기관을 부처별 위원회, 출자·출연·보조기관까지 확대

| 구 분   | 현 행               | 개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개 시점 | 청구시 공개            |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공개                  |
| 공개 대상 | 목록만 공개, 청구시 원문공개  | 원문까지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개 건수 | (‘12년) 31만건       | (매년) 1억건(추정)                    |
| 대상 기관 |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| 위원회, 출자출연·보조기관 추가 (약 1,700개 확대) |

○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

- 생산된 문서가 정보공개시스템(open.go.kr)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 될 수 있도록 「원문정보공개시스템」 구축

\* 중앙 및 시·도 우선 보급(‘14년) 후, 시·군·구로 확산(‘15년)



☞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‘13.6월)

\*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(4.16)

##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

### ○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

- 민간의 개방 수요가 많고,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 추진

\* 교통·지리·기상 등 공공정보 개방 : ('12년) 1,005종 → ('17년) 6,400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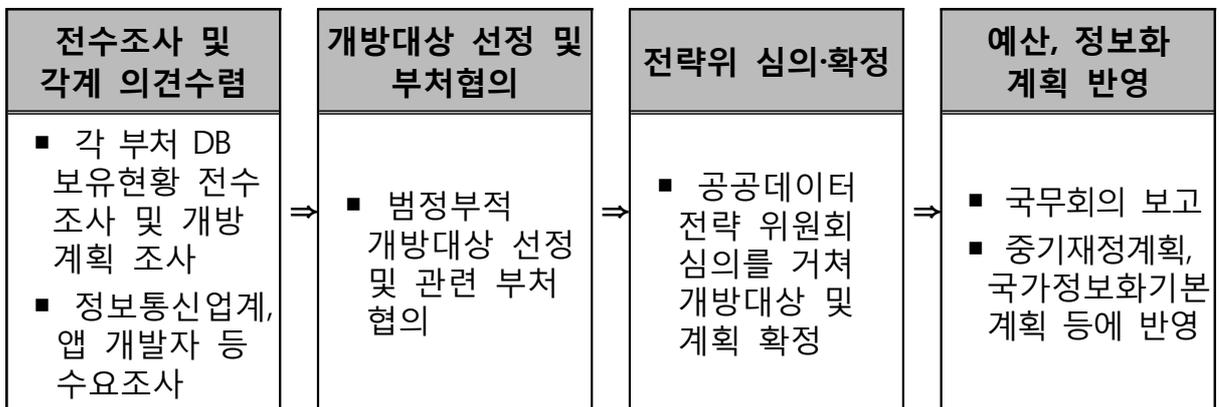
\* 수요가 큰 변동데이터는 Open API로 별도 제공(안행부) : ('12년) 35종 → ('17년) 150종

#### <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계획(예시) >

| 구 분  | 현 행  | 확 대 (예시)   |
|------|--|--|
| 교통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버스 실시간 운행정보, 노선정보, 정류소정보 등 <b>54종</b></li> </ul>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버스·지하철·항공·항만운행 실시간정보, 지역별 교통정보, 도로정보 등 <b>355종</b></li> <li>⇒ 모든 교통시설 및 운행정보 연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, 교통정보·주변시설정보 통합제공 등</li> </ul> |
| 지리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공간정보, 해수면높이 관측정보, 국가지반정보, 국가 하천전자지도 등 <b>76종</b>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제된 GIS정보,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지리정보 등 <b>500종</b></li> <li>⇒ 다양한 정보(교통·재난·기상·관광)와의 융·복합으로 앱 및 신규 서비스 창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
| 교육정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교 일반현황, 교육 과정 정보 등 <b>81종</b>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육기관 평가정보, 입시 및 시험정보, 다양한 교재정보 등 <b>533종</b></li> <li>⇒ 교육관련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로 신규시장 창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출처 : 한국정보화진흥원(NIA) 자체조사결과(전수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)

- 공공DB 보유현황 전수조사, '개방 5개년 로드맵' 수립('13.상반기)



<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(예시) >

| 분야  | AS-IS  | TO-BE  |  |
|---|--|--|--|
|   | 1차 활용 (개별활용)   | 2차 활용 (정보간 연계)   | 3차 활용 (타산업과 융합)  |
| 기상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관련산업) 기상예보 산업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관련산업) 기상정보와 재해, 의료, 에너지 등의 정보를 연계, 특화된 기상서비스 제공</li> <li>* 예: 기상컨설팅, 기상정보업, 기상정보업 등</li> </ul>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관련산업) 기상정보를 농업, 건설, 레저, 식품, 유통, 의류산업 등 타산업과 융합·확산</li> </ul>   |
|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서비스) 기상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안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서비스) 재해보험컨설팅, 맞춤형날씨정보, 재해 예보, 에너지소비량 예측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서비스) 기상정보-타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</li> <li>* 예 1) : 기상정보를 활용해 특화작물 선정 파종시기 농약살포 시기 등 안내</li> <li>* 예 2) : 기상정보를 도로 유지보수, 노면상태 점검, 항로설정, 이착륙 결정 등 비행계획 수립에 활용</li> <li>* 예 3) : 음료, 주류, 빙과, 냉난방기 등 계절상품 생산업체가 원자재 구매, 생산 및 출고량 조절, 제품진열, 광고 등에 기상정보 활용</li> </ul> |
|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일자리) 기상사업자, 기상통보관, 기상 앱 개발자, 기상시스템 개발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일자리) 기상컨설턴트, 기상감정기사, 기상예보사 등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일자리) 기상정보를 농업, 교통, 건설, 레저 등 타산업과 융합해 서비스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</li> <li>* 예 : 기상정보를 활용한 농작물 전문 인터넷 보험회사 등</li> </ul>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미국 기상산업('11년) : 종사자 35천명, 매출 9조(한국: 567명, 2,232억)</li> <li>▶ 기상기후산업이 타산업과 융합해 발생하는 신규 창출('12년) : 396억</li> </ul> |  |  |  |
| 교통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관련산업) 교통정보 제공업, 교통방송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관련산업) 교통정보와 위치, 시설, 재난, 여행정보 등을 연계, 특화된 교통서비스 제공</li> <li>* 예 : 고속도로 휴게시설 산업, 여행 렌트업, 스마트 자동차산업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관련산업) 교통정보를 관광, 물류, 무역, 의료, 부동산 산업 등 타산업과 융합·확산</li> </ul>   |
|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서비스) 버스도착시간 정보 등을 스마트폰·정류장안내시스템에서 실시간 안내, 차량 정체구간 실시간확인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서비스) 육상항공해상 등의 교통정보와 숙박요금 및 관광지 정보 등을 연계하여 일괄 예약하는 여행상품 개발 서비스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서비스) 교통정보-타산업과 연계를 통한 산업 맞춤형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</li> <li>* 예 1) : 실시간 교통정보 및 CCTV정보 등을 물류, 무역업 등에 활용해 출,도착 시간 조정 및 물류란 해결</li> <li>* 예 2) : 교통정보를 비상 응급정보와 융합해 구급차, 소방차 운행 효율화</li> <li>* 예 3) : 교통정보를 부동산 정보와 융합해 최적의 부동산 입지 선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일자리) 교통예보관, 교통안내리포터, 교통 모바일 앱 개발자, 교통시스템 개발자</li> </ul>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일자리) 여행사 맞춤형 상품개발자, 교통서비스 분석관 등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일자리) 교통정보와 관광, 물류, 부동산 등 타산업과 융합해 서비스하는 일자리 창출</li> <li>* 예 : 교통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분석가, 대체교통수단 업자 등</li> </ul>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정보 이용시 비용절감 : 연 6,175억 절감</li> <li>▶ 교통정보 활용으로 교통혼잡비용 감소 : 연 약3조 6천억(전국 교통혼잡비용 : 연 약 30조)</li> </ul>  |  |  |  |

○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

- 창조·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부처 종합 지원대책 마련
  - \* 정부-민간 합동 추진단(T/F) 구성·운영
- 현장의 요구 및 애로사항을 발굴·수렴하여 집중 지원
  - \* '범부처 융합 애로·규제 개선방안' 수립·추진
- 관련 부처, 기업, 협회 등 '협업 커뮤니티' 구축,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지원
- 창업구상-사업계획 수립-실행-기업경영 전과정에 대한 One-stop 지원

| 창업 구상   | 주요 지원내용(예시)  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아이디어 공모</li> <li>▪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및 타당성 검증</li> <li>▪ 지식재산권 지원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앱 창업 경진대회 개최, 국민창업 프로젝트 신설</li> <li>▪ 아이디어를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기술로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지원</li> <li>▪ 아이디어의 특허출원 지원 및 분쟁대응 지원 강화</li> </ul> |



| 사업계획 수립   | 주요 지원내용(예시)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사업계획 검토</li> <li>▪ 자금조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사업계획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적정화 검토</li> <li>▪ 일반 국민에게 소액자금을 모집하는 CROWD 펀딩 제도화</li> <li>▪ 앱 전용 R&amp;D 자금운영 및 지원 확대, SW 특화펀드 조성</li> <li>▪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(코넥스) 개설</li> </ul> |



| 사업 착수   | 주요 지원내용(예시)  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회사 인허가, 공장설립</li> <li>▪ 인력충원 및 교육</li> <li>▪ 기술지원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창업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</li> <li>▪ 앱 창업 멘토단, 창업사관학교, 창업 아카데미 등 운영</li> <li>▪ 경영관리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</li> </ul> |



| 기업 경영   | 주요 지원내용(예시)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신고</li> <li>▪ 세제지원</li> <li>▪ 판로확보 및 수출지원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조세특례 지원대상에 창조형 서비스업 추가</li> <li>▪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협업체 구성·지원</li> <li>▪ 정부가 '첫번째 고객 되어주기' 프로젝트 운영</li> <li>▪ 수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R&amp;D, 해외마케팅, 수출금융 등 집중지원하는 'Global highway 프로그램' 운영</li> <li>▪ 수출준비자금 보증, 수출개시기업 자금보증 신설 등</li> </ul> |

⇒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및 성공사례 창출, 제2의 벤처붐 확산

-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
  -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'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'로 일원화
  - DB를 개방형·표준형으로 전환하여 활용 편의성 제고
  -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사업 확대
  -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, 개방정보 선정을 위한 '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' 등 신설·운영
- ☞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3.6월)
  - \* 법사위 계류중(5월) → 의결(6월 임시국회 예정)

### 3 민·관 협치 강화

- 국민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 다양화
  - 정책의 수립·집행·평가 전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 확대
    - \* 생활공감모니터단 확대·개편, 분야별 정책자문단 구성·운영 등
  - 전화·문자·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·의견 등 접수
    - \*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에 「국민행복제안센터」 설치·운영('13.5월)
- 온라인 민·관 협업 공간(플랫폼) 구축
  - 대규모 국책사업(예 : 5천억 이상)은 '전자 공공토론' 상정 의무화로 국민의 소리 반영 강화
  -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아젠다 설정, 정책형성, 집행 및 평가 전단계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
-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
  - 행정예고절차 개선, 청문·공청회 제도 운영 내실화 등 국민의 행정참여 확대
- ☞ 「행정절차법」 개정('13.10월 국회제출)

## 전략 2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

| 현재 (As-Is)   | 미래 (To-Be)  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▮ 부처 중심의 칸막이 현상</li> <li>▮ 정부지식의 개별적·단편적 축적·활용</li> <li>▮ 다양한 정책정보의 통합 활용 미흡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▮ 정부 내 소통·협업 활성화</li> <li>▮ 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식기반 행정</li> <li>▮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</li> </ul> |

### 4 정부 내 칸막이 해소

○ 국정·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

- 국정과제(140개) 및 협업과제(170개) 중 부처간 시스템 연계·통합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

| 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<b>통합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</b> : 방통위(통신재난관리시스템) - 복지부(응급의료 시스템) - 방재청(재난관리시스템) 등 정보시스템(20개 기관, 27개 시스템) 연계<br/>⇒ 범국가 재난관리정보 공유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</li> <li>▸ <b>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</b> : 국세정보(국세청)-관세정보(관세청)-지방세 정보(안행부)-지자체 등 정보시스템(50개 기관, 130개 정보) 연계<br/>⇒ 과세자료 분산관리에 따른 착오부과 방지 및 누락세원 발굴</li> <li>▸ <b>국가표준·인증 통합정보시스템</b> : KS, ISO, 단체표준 표시인증, 위생안전 기준인증 등 국가표준 및 인증정보(19개 부처, 185개) 연계<br/>⇒ 각종 인증 등을 받기 위해 동일 검사를 여러번 받는 비용과 불편 해소</li> </ul> |
|--|

○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'갈등과제' 지원

- (대상) ODA, 유아교육·보육 통합, 물관리, 다문화가족, ICT 등
- \* 국조실 협업과제와 연계하여 추진

- (지원방안)

- i) 관련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·통합 추진
- ii) 협업수행체계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, 기능 조정에 반영
- iii) 관련 부처간 핵심직위(국·과장급) 인사교류

○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'협력과제' 지원

- 부처간 협업으로 win-win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별 시스템 연계

- ▶ **국가긴급이송정보망 구축** : 긴급이송정보(방재청)-병원평가정보시스템(복지부) 등 연계  
⇒ **긴급환자 이송시** 병원정보를 파악, **환자별 증세에 맞는 최단거리 병원**에 이송, 인명구조율 향상
- ▶ **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,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**  
: 제대군인/북한이탈주민/경력단절여성 정보(국방부/통일부/여가부) - 직업훈련정보(고용부) - 중소기업 구인정보(중기청) - 사회복지통합망(복지부) 연계  
⇒ 제대군인, 북한이탈주민, 경력단절여성 등 **취업 희망 계층**에 대해 **직업 교육 등 본인 적성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정보** 제공
- ▶ **재외국민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서비스 제공** : e-consul 시스템(외교부) - 운전면허 정보(경찰청) 연계  
⇒ **외국에서 불가능했던 운전면허 갱신서비스를 영사관에서 제공**
- ▶ **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(전자발찌)** : 위치추적장치(법무부) - 학교위치정보(교육부) - 아동보육시설위치정보(복지부) 연계  
⇒ **성범죄자 위치와 학교 및 보육시설 위치를 연계, 성범죄 재발 방지**

-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

- \* 대상정보(249종→349종) 및 이용기관(공공기관 등 추가) 확대로 정보 공유·활용기반 강화

## 5 협업·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

### ○ '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' 구축

- 소속부처와 상관없이 전 공무원들이 PC·스마트 기기로 의사소통 및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「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」 구축



- 각 부처의 정책정보, 출장·해외연수 결과 등 각종 보고서를 공유하고,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「지식경영시스템」 구축
  - \*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과 연계,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품질 제고

### ○ 원격근무 비효율 극복을 위한 디지털 협업 시스템 구축

- 기 구축된 영상회의실\* 이용 활성화('13.1~4, 총 59회 538명 활용)
  - \* 국무회의용 2, 정부공용 4, 개별부처용 4, 스마트워크센터 13 등 23개
- 「디지털행정협업시스템」을 통한 PC영상회의 병행 활용
- 스마트워크센터\*를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이용 확대
  - \* 서울(55석, '13.1월), 세종(95석, '12.12월), 과천(20석, '13.4월), 국회(63석, '13.4월) 등
- 출장·이동 중에도 스마트폰, 태블릿 PC 등을 통해 메일·메모보고 활용 지원
  - \* 보안문제 해결 후 결재까지 지원 추진('14년 이후)

### ○ 지식·정보 공유 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

-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(~'17)
  - \*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(1,233개) 중 60%(약 740개)를 클라우드로 단계적 전환(~'17)

##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

### ○ 국가미래전략 수립 지원

-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파악 등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, 국가적 과제 발굴 및 미래비전 수립 지원

\* 국가지식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, 미래비전 수립을 지원하는 '국가미래전략센터' 구축

- 데이터 분석·활용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·고용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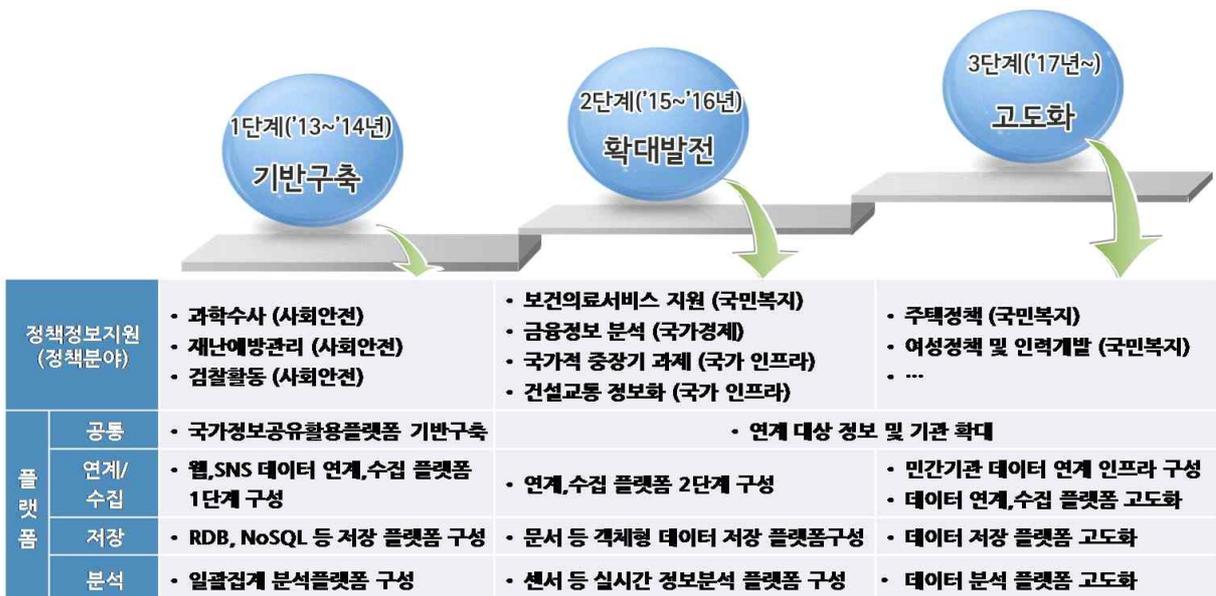
### ○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

- 다양한 공공·민간정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품질 향상 지원
- 안전, 복지 등 6대 분야 16개 시범과제 추진(3개 과제 우선 추진)

- ▶ (치안) 범죄발생 장소·시간 예측을 통한 범죄발생 최소화(경찰청, 안행부 등)
- ▶ (재난·재해) 예측기반의 자연재해 조기 감지·대응(기상청, 방재청 등)
- ▶ (교통안전)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(경찰청, 지자체 등)

### ○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시스템 구축

- 각 부처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분야별로 연계하고, 공유·분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부처별 시스템 중복구축 방지



## <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제도 혁신 >

- ◆ 개방·공유·소통·협력의 정부3.0 기본가치를 정부운영의 전 과정에 확산
- ◆ 부처간, 중앙-지방간, 정부-민간간 전 방위적으로 정부운영제도 혁신

### ○ 유연하고 과제 지향적인 조직관리

- 조직진단으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**협업체계 재설계** 및 특정 시·도 대상 시범실시
- 부처·부서간 경계를 넘나드는 **과제중심형 조직(부처간 TF 등)** 적극 활용
- 부처단위 정원관리를 탈피한 「**범정부 통합정원제\***」 도입

\* 매년 전부처 정원의 1%를 통합정원으로 지정, 협업과제에 정원 우선 배정

### ○ 인사교류 대폭 확대로 협업문화 조성

- 중앙부처 핵심보직(국·과장)간 계획교류 및 「**중앙-지방 교류목표제**」 실시
- 협업관련 분야 인력 **일정비율(10% 이상) 의무교류**
- 개방형직위의 외부임용 비율을 높이고(40%→50%), 전부처 대상으로 공모하는 직위를 현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

\* 외부기관 경력 여부를 본부 실·국장 임용 심사에 반영하고, 교류자에 대한 승진·수당·보직 등 인센티브 제공

### ○ 협업과제 중심의 예산·평가제도 운영

- (**예산**) 협업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협업 T/F에 관련 예산 조정 권한 부여, 협업 우수기관에 예산 인센티브 제공

\* 예산 심의시 '타 기관 업무 중복성' 및 '협업 가능성' 여부를 사전에 심사, 협업 선도과제 관련예산을 통합심의하고 우선 지원

- (**평가**) 정부업무평가에 '협업추진 실적'을 포함한 정부3.0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, 장기적으로 주관부처가 아닌 참여부처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

## 전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

| 현재 (As-Is)  | 미래 (To-Be) 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행정서비스별 개별 신청·제공</li> <li>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미흡</li> <li>정보기술과 행정서비스간 괴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</li> <li>접근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</li> <li>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</li> </ul> |

###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

#### ○ 생애주기별·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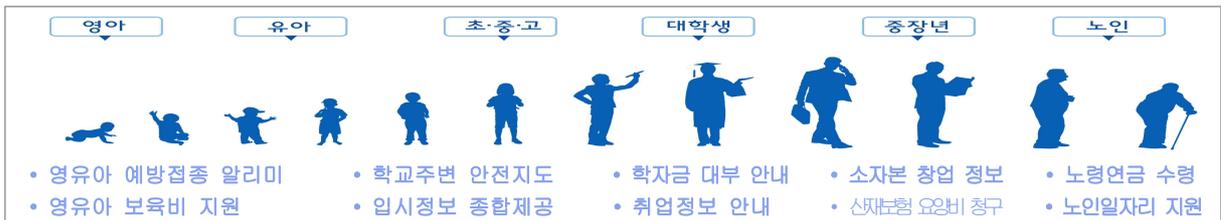
- 한번의 정보 입력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·통합적으로 지원

\* (사례) 출생신고시 보육비 지원신청, 예방접종 일정 안내 등

- 부처별 시스템 통합·연계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

\* 사회보장시스템(복지부), 고용서비스정보망(고용부), 주민등록시스템(안행부) 등

<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(예시) >



#### ○ 「민원 24」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제공

- 개인별 다양한 생활민원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안내

\* (예) 민원처리결과, 여권만료일, 운전면허 갱신일, 온라인 취학통지서, 이동통신 감면신청, 세금·공과금 체납조회 등 통합 안내

#### ○ 시스템 연계·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

- 기관간 시스템·정보 연계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▶ **간단e 납부** : 위택스(안행부)-과태료시스템(경찰청)-서울행정(지자체)-e지로(금융결제원) 등 관련시스템(8개 부처, 244개 지자체, 22개 은행, 14개 카드사) 연계  
⇒ **세금·공과금 통합 납부**로 국민 편의 제고 및 징수·수납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
- ▶ **재난피해주민 지원 시스템** : 복지정보(복지부)-통신정보(미래부)-전기정보(산업부)-교육정보(교육부)-주민정보(안행부) 연계  
⇒ **재난피해 주민에게** 세제 지원, 전기·통신료 감면 등 **혜택 통합 제공**

##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

### ○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 마련

- 「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」 구축·운영으로 온라인 지원 신청 및 필요정보 제공 등 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



### ○ 창업-공장설립 등 기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

- 기업 유형별(소상공인, 중소기업, 제조업 등) 맞춤형 서비스 제공

### ○ 지자체에 허가 전담창구(「허가민원과」) 설치 확대

- \* (예) 경기도 김포시(종합민원과), 포천시(허가담당관실), 양주시(민원해결과) 등

### ○ 창업·기업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- 「기업활동 지원 전담반」 구성,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발굴·해결

##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

### ○ 주민센터 등 최접점 민원창구 확대

-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
- 주민센터·우체국간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
  - \* 집배원을 이용하여 취약계층(독거노인, 거동불편자 등) 생활상태 주기적 점검

### ○ 장애인·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

- 인터넷·앱 접근성 표준화 및 우수 웹사이트·앱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
- 영상수화 상담, 음성 민원서류,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등

##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

### ○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

- 정보기술(전자태그, 위치정보 등)을 활용, 신개념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정부(U-Gov) 구현

\* 생활안전·환경안전·민생치안·맞춤형복지 등 6개 분야 대상 집중 추진

| 과 제 명(예시)                     | 사 업 내 용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가축분뇨 전자<br>인수인계시스템<br>(환경부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가축분뇨의 무단투기, 불법방류 등을 사전 방지</li> <li>- 가축분뇨의 배출, 운반, 처리자간 인계 과정에 GPS, 중량센서 등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</li> </ul>  |
| 재해구호물자<br>통합정보시스템<br>(방재청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재해구호물자의 실시간 재고·유통관리를 통해 지자체간 수급을 원활하게 관리</li> <li>- RFID기반 물자관리시스템 확충 및 재해현장용 모바일앱 개발</li> </ul>              |
| 음파활용<br>위해동물 퇴치<br>(국립공원관리공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음파, LED조명 등을 활용한 u-에코펜스 설치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</li> <li>- 야생동물을 자동 감지하고 음파를 활용한 퇴치 등 원격감시·제어시스템 구축</li> </ul>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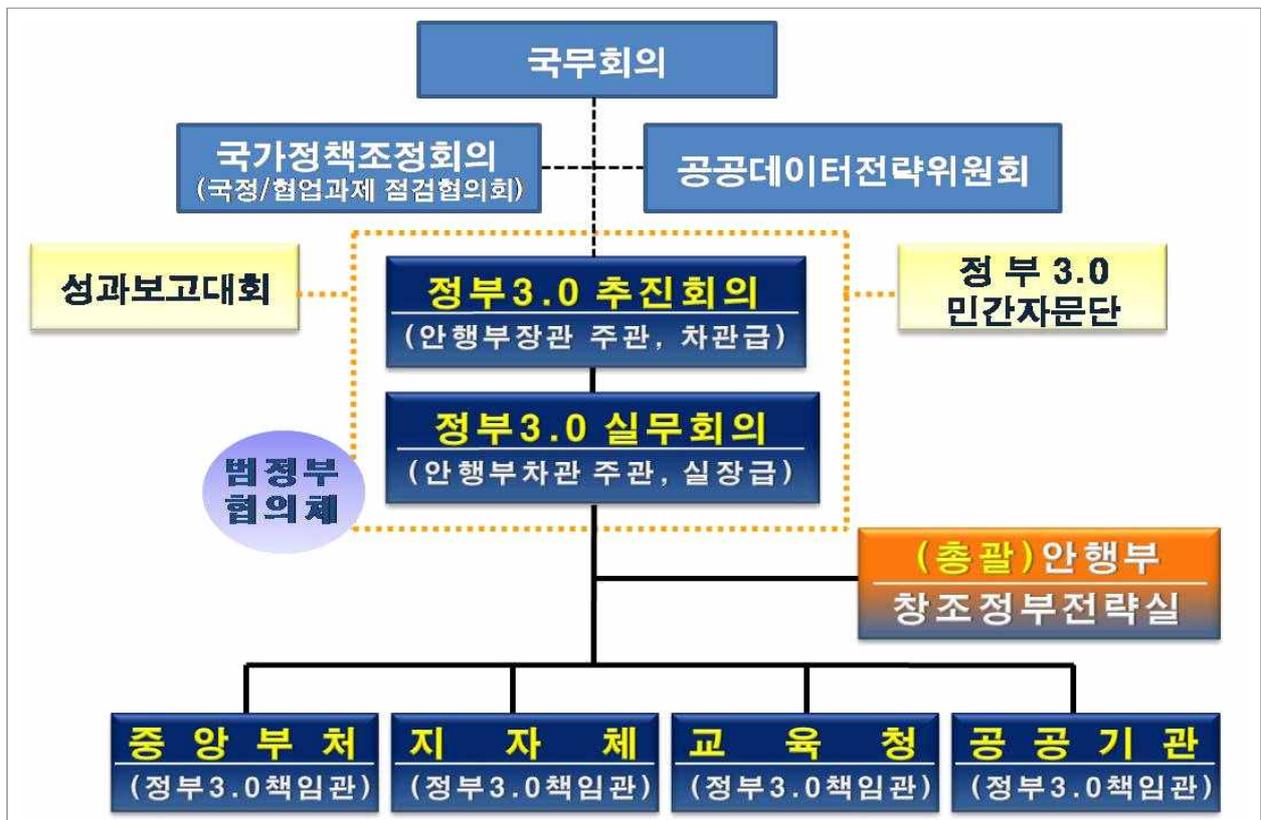
### ○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(예시)

- '스마트 안전귀가' 서비스 기능 강화(안행부)
- SOS 국민안심서비스 고도화(안행부, 경찰청)
- 도로이용 불편사항 신고 서비스(국토부)
-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(외교부)
  - \* 여권 분실, 교통사고, 질병 발생 등 주요 상황별로 메뉴 개편
- 실시간 기상정보와 연계한 안전한 산행정보 제공(환경부)
- '기업마을 앱'을 통해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정보 제공(중기청)
- 위치기반 공증사무소 검색 및 모바일 공증상담 서비스(법무부)
- 농업재해 관련 모바일 '안전영농 지키미' 서비스(농식품부)

## IV

## 정부3.0 추진체계

- **(정부3.0 협의체)** 정부내에는 정부3.0 추진회의(안행부장관 주관, 차관급) 및 실무회의(안행부차관 주관, 실장급)를 구성·운영하고,
  - '민간자문단'을 구성하여 민간의 의견 적극 반영
  - \* 기초실장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책임관으로 지정('창의행정담당관'으로 변경 추진)
- **(국정과제)** 국정과제추진협의회(BH), 협업점검협의회(국조실) 등 국정과제관리체계를 활용, 국정·협업과제 지원 및 관리
- **(공공데이터 개방)**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통해 공공정보 적극개방 추진
- **(성과관리)**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를 개최, 정부3.0 전체 성과 관리



\* 정부3.0 가치 공유·확산을 위해 전정부적 교육·홍보 적극 추진

## 참고 1 정부3.0 추진일정

### □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반마련<br>(~'13년 상반기)  | 본격추진<br>(~'13년 하반기)   | 정착 및 확산<br>('14년~'17년)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
| 공공정보<br>적극공개로<br>국민일자리<br>충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공개법 개정<br/>※ 4월 국회 제출</li> <li>○ 원문공개 시스템 구축<br/>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공개법 시행령·<br/>시행규칙 개정</li> <li>○ 원문공개 가이드라인<br/>마련</li> </ul>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공개법령 전면<br/>시행</li> <li>○ 원문공개 시스템 구축<br/>및 서비스 확대(시군구)</li> </ul>             |
| 공공데이터<br>민간 활용<br>활성화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데이터법 제정<br/>※ 5월 법사위 계류중</li> <li>○ 범정부 공공정보개방<br/>종합계획 수립</li> </ul>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데이터법 시행령·<br/>시행규칙 제정</li> <li>○ 오픈데이터 포럼 운영</li> </ul>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데이터 제공·개방<br/>수준 평가, 환류 등</li> <li>○ 공공정보 활용센터 설치<br/>운영, 주요DB 품질개선</li> </ul> |
| 민관<br>협치 강화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온라인 민관협업 국내외<br/>우수사례 조사·연구</li> <li>○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<br/>행복제안센터 개설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온라인 민·관협업 공간<br/>시스템 개발</li> <li>○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<br/>및 만족도 평가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온라인 민·관협업 공간<br/>운영</li> <li>○ 국민행복제안센터 기능<br/>강화 등 고도화</li> </ul>               |

### □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반마련<br>(~'13년 상반기)   | 본격추진<br>(~'13년 하반기)  | 정착 및 확산<br>('14년~'17년)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정부 내<br>칸막이<br>해소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정부 정보 연계·통합<br/>계획 마련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역별 정보 연계·통합<br/>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정부 정보 연계·통합<br/>시스템 운영</li> </ul>  |
| 협업소통<br>자원을 위한<br>정부운영<br>시스템<br>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클라우드 전환업무<br/>부처 협의 및 확정</li> <li>○ 조직진단계획 수립</li> </ul>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74개 업무시스템 클라<br/>우드로 전환</li> <li>○ 인사교류 확대계획 수립<br/>및 통합정원 인력재배치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17년까지 620개 이상<br/>시스템 클라우드 전환</li> <li>○ 정부통합의사소통 및<br/>지식경영 시스템 구축</li> </ul> |
| 빅데이터<br>활용한<br>과학적<br>행정구현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빅데이터 활용 공통기반<br/>시스템 구축방안 수립</li> <li>○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<br/>방안 연구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빅데이터 활용 공통<br/>기반 시스템 구축</li> <li>○ 국가미래전략센터<br/>구축방안 수립</li> </ul>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통기반 확대구축 등<br/>시스템 고도화</li> <li>○ 국가 미래전략센터<br/>구축·운영</li> </ul>               |

□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반마련<br>(~'13년 상반기)   | 본격추진<br>(~'13년 하반기)  | 정착 및 확산<br>('14년~'17년)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
| 수요자<br>맞춤형<br>서비스<br>통합제공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인, 출산, 노인대상 행정서비스맵 시범 제작</li> <li>○ 통합생활 민원정보 서비스 계획 수립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문화가정 등 행정 서비스맵 추가과제 발굴</li> <li>○ 생활민원 정보서비스 시범 구축</li> </ul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·제공</li> <li>○ 생활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및 기능 고도화</li> </ul>   |
| 창업 및<br>기업활동<br>원스톱지원<br>강화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앙·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조사·분석</li> <li>○ 기업활동 지원전담반 구성·운영</li> </ul>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</li> <li>○ 현장의견 수렴 등 전담반 본격 활동</li> </ul>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스템 운영 및 지자체 확대</li> <li>○ 추진상황 모니터링·운영성과 분석</li> </ul>              |
| 정보취약<br>계층의<br>서비스<br>접근성제고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센터 복지 허브 전환 연구</li> <li>○ 우체국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</li> </ul>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능전환 방안 마련 및 합동추진단 운영</li> <li>○ 우체국 등 활용, 민원 서비스 시범 실시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능 전환 및 복지인력 확충</li> <li>○ 우체국 등 활용, 민원 서비스 성과분석 및 환류</li> </ul>     |
| 새로운<br>정보기술<br>활용 맞춤형<br>서비스 창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규 개발사업 확정</li> <li>○ 문자, 영상, 앱 등을 통한 U-119 신고서비스 개시</li> </ul>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기술 활용 추진과제 현장점검 등 성과분석</li> <li>○ 「모바일 재난정보 포털 앱」 등 구축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보기술 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발굴·추진</li> <li>○ 농업재해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등 구축</li> </ul> |

□ 변화 및 성과관리

| 구분   | 기반마련<br>(~'13년 상반기)   | 본격추진<br>(~'13년 하반기)  | 정착 및 확산<br>('14년~'17년)  |
|------|---|--|---|
| 변화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 3.0 교육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</li> <li>○ 홍보계획 수립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3.0 순회교육 및 각급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설</li> <li>○ 홍보컨텐츠 개발 및 일간자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프로그램 보완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</li> <li>○ 정부3.0 대표 브랜드 정책 발굴, 중점홍보</li> </ul> |
| 성과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 3.0 성과관리 지표 개발 연구용역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 3.0 성과보고대회 개최 성과관리 지표 개발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 3.0 성과보고대회 개최(분기별), 정부3.0 추진성과 평가·분석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

## 참고 2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공개 대상(예시)

| 대분야                  | 중분야   | 사전공개 대상정보(예시)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국민<br>밀접<br>생활<br>정보 | 의료·복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노인·아동·장애인 복지시설 현황</li> <li>각종 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</li> <li>어린이집 평가 인증결과</li> <li>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자</li> <li>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약기관 명단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      | 조세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액·상시 체납자명단</li> <li>국·지방세 관련 과세시가 표준액 산정내용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문화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</li> <li>문화재 및 문화공간 현황</li> </ul>   |
| 국민<br>안전             | 식품·위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해식품 및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</li> <li>위생의무 위반 업소 명단, 음식점 위생등급제</li> <li>정수장·수돗물 수질검사 결과</li> <li>농산물 안정성 조사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치안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교폭력 현황, 청소년 범죄현황</li> <li>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</li> <li>교통·산업·보건분야 안전정보 종합, 지수화(안전지수)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환경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</li> <li>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현황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교통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교통영향분석 평가결과</li> <li>자전거 도로 현황</li> <li>지역별 교통사고 현황</li> </ul>   |
| 정부<br>투명성            | 계약정보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관별 계약실적, 물품 구매현황, 수주실적 상위 조달업체 현황</li> <li>공사발주 세부내용 및 계약 전 과정</li> </ul>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국정감사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</li> <li>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</li> <li>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결과</li> <li>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,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
| 재정<br>정보             | 지방재정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기관 및 지자체 부채 현황</li> <li>지방공기업 경영 전반(임원, 보수 등) 및 재정현황</li> <li>지방 일반재정·교육재정·공기업 포괄 통합재정정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공공사업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행사·축제, 청사신축 등 주요 공공사업 원가정보</li> <li>공공시설, 대규모 사업공사 관련 정보</li> </ul>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물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요금 원가 산정기준</li> <li>지자체별 주요 서민생활물가</li> </ul>  |

※ 시민단체 공개 요구사항, 여론조사, 전문가 간담회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민의 수요가 큰 정보를 추가 발굴, 공개 예정

### 참고 3 공공정보 개방 로드맵(예시)

※ 동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(NIA) 자체조사에 근거한 잠정자료로서, 최종 연차별 개방계획은 공공DB 전수조사 및 민간 수요조사를 거쳐 수립예정('13.상반기)

| 구분             | 분야별                  | 개방현황 (2012)   | 추가 확대계획(2017)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<b>계</b>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1,005종  | 6,400종  |
| 정부<br>운영       | <b>일반<br/>공공행정</b>   | 시사경제용어정보,<br>국회방송홈페이지정보,<br>지자체의회회의록정보, 영상회의정보,<br>국회방문자센터정보,<br>조달 입찰정보, 나라기록정보,<br>국가관리전산정보, 규제등록정보,<br>국기기록영상정보,<br>선거통계정보, 지방제세정보,<br>공기업경영공시정보, 지자체예산정보,<br>(131종) | 금융감독정보,<br>보험사고정보,<br>승강기안전관리정보,<br>개발제한구역관리정보,<br>공공기관경영정보,<br>예결산정보<br>(433종) |
|                | <b>통일·외교</b>         | 주한공관정보, 북한학술정보,<br>수출입통관정보, 수입적하정보,<br>재외동포현황, 해외안전여행정보<br>(7종)   | 북한생활정보,<br>해외협력업체정보<br>(46종)  |
| 국가<br>안전<br>관리 | <b>국방</b>            | 민방위국민행동요령정보,<br>국방기술품질정보,<br>국방정책정보, 방위물품통계정보,<br>해외국방산업동향정보, 군수품동향정보<br>전사자검색정보, 현충원 안장자 정보<br>(21종)   | 국가유공자복지정보,<br>예비군기록정보,<br>방산업체정보,<br>군수품규격정보,<br>입영통지정보,<br>병적증명정보<br>(152종)    |
|                | <b>공공질서<br/>및 안전</b> |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정보, 소방정보,<br>재외동포현황정보, 국가인권정책정보,<br>입법지원정보, 산사태정보, 산불정보<br>(42종)   | 112신고접수정보,<br>사건수사정보<br>(77종)   |
|                | <b>도시 및<br/>지역개발</b> | 공시지가정보, 도시계획고시정보,<br>도시재성정보, 전통시장정보, 수문정보,<br>해양지리정보, 토지이용규제정보<br>(83종)   | 도시계획정보,<br>토지매수정보<br>(527종)   |
| 경제<br>산업       | <b>과학기술</b>          | 국가생물종정보, 기상예보정보,<br>국가지진정보, 산림과학정보,<br>다국어음성정보<br>(55종)   | 천문우주지식정보,<br>해양위성정보<br>(54종)  |

| 구분       | 분야별         | 개방현황 (2012)  | 추가 확대계획(201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|
|          | 농림해양<br>수산  | 냉동선어류정보, 농수산물가격유통정보,<br>농식품안전정보, 농업기술정보,<br>동물유전체정보, 작물정보<br>(31종)   | 도축검사정보,<br>농식품품질검역정보<br>(185종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산업·중소<br>기업 | 기업지원정보, 녹색인증정보,<br>환경영향평가정보, 공공구매종합정보,<br>중소기업관련통계정보,<br>창업보육센터정보,<br>전기안전정보, 신재생에너지인증제품정보,<br>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정보,<br>투자유치정보<br>(62종) | 상권정보,<br>창업지원사업정보,<br>가구별전력량정보,<br>수력발전정보<br>(370종) |
|          | 수송, 교통      | 도로교통시스템정보, 서울도시철도정보,<br>대중교통정보, 항공운항정보,<br>교통량통계정보<br>(72종)  | 선박운항정보,<br>전국교통소통정보<br>(430종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통신          | 전자정보통신정보, IT통계정보,<br>우편번호정보, 인터넷주소자원정보<br>(11종)  | 방송콘텐츠제작정보,<br>통신망정보<br>(66종)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회<br>복지 | 환경보호        | 건물별온실가스정보, 생태자연보호정보,<br>대기오염정보, 적조정보시스템정보,<br>환경영향평가정보<br>(24종)  | 폐기물배출정보,<br>친환경상품정보<br>(152종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보건          | 병원평가정보, 국가암정보센터정보,<br>건강검진기관안내정보, 건강보험정보,<br>약물유전정보, 의료기기정보<br>(16종)   | 통합보육정보,<br>요양기관정보<br>(84종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사회복지        | 일자리제공정보, 노인일자리사업정보,<br>인재정보, 보건산업통계정보,<br>국가기술자격정보 (47종)   | 장애인고용정보,<br>창업정보<br>(191종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육<br>문화 | 문화체육<br>관광  | 문화유산정보, 국제종합경기대회정보,<br>영화정보, 국내관광정보, 한국사정보,<br>생활체육동영상정보, 공연정보<br>(172종)   | 체육시설예약정보,<br>저작권보유정보<br>(304종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교육          | 학술연구정보, 전자도서관정보,<br>디지털교과서정보, 교원연수정보,<br>지자체학업성취정보, 학위논문정보<br>(81종)  | 지방교육재정정보,<br>대학입시정보<br>(604종)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참고 4 정보개방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

### □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

-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강화
  -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원인인 보안약점을 SW 개발단계부터 사전 제거하는 「시큐어 코딩」 적용 확대
    - ※ (신규시스템) 40억 이상('13) → 20억 이상('14) → 모든 정보화사업('15)
    - (기존시스템) 시범적용·적용방안 마련('13) → 단계적 확대('14~'17)
- 전자정부서비스 중요도에 따른 「보안등급제」 도입·중점관리
  - 업무영향범위, 데이터 중요도 등 고려, 보안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상위 보안등급(1~2급)에 대해서는 보안수준 진단, 개선조치 강화
- 「정부전산백업센터」 구축 추진
  - 전쟁, 테러 등 물리적 공격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전산시스템 보호,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3의 장소에 구축

### □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안전한 활용 기반 구축

-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·평가 및 침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
  - 민감 개인정보 사전 필터링 및 불법 오·남용 실태 점검
    - \* 개인정보 모니터링시스템 및 「범정부 합동점검단」 운영
  -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결과는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
-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「보호 가이드라인」 마련 및 개인 비식별화(익명화) 처리기법 보급
  -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기준에 대한 교육 강화
    - \* 개인정보보호 「지역거점 지원센터」구축·운영(100여개, ~'17)